

#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부위원장 모두발언

2019.8.12.(월) 08:00~09:00

은행회관 16층

## 금 융 위 원 회

※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 
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#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

## 1. 인사말씀

□ 반갑습니다.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입니다.

-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금발심 위원님들과 금감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
□ 정부는 지난 3월 「혁신금융 비전 선포식」 이후, 금융권과 함께 금융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에 착수하였습니다.

- 특히, 혁신금융이 시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,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의 '일하는 방식'도 바뀌어나가기로 했습니다.

➡ 오늘 이 자리는 그간 혁신금융 과제의 이행상황을 공유하고,

- 감독방식 쇄신을 위한 인·허가, 검사·제재 등 “금융감독 전반의 혁신방안”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.

## 2. 혁신금융 이행상황

□ 혁신금융은 종전 부동산담보·가계금융 위주에서 '미래성장성·모험자본' 중심으로의 금융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.

- 이를 위해, 대출 - 자본시장 - 정책금융을 아우르는  
全 금융영역에서 광범위한 법령·제도개선 과제를 수립하고,
- 지난 4월 출범한 「혁신금융 민관합동 TF」를 구심점으로,  
금융권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 
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.

① (동산금융) 먼저, 동산금융 활성화를 통해  
중소·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.

- 지난 1년 동산금융 신규공급액은 약 6천억원으로 예년 대비 약 8배, 대출잔액은 약 6,600억원으로 약 3배 이상 늘어났고,
- 금리인하(최대 3.5%p), 대출한도 확대(최대 1.5배), 담보자산 다변화 등 동산금융의 실질적인 혜택도 확대하였습니다.
- 8월 중에는, 법무부와 함께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「동산채권담보법」 개정안도 차질없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.

**② (모험자본) 대규모 성장자금 공급, 자본시장 기능강화 등을 통해 新산업·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.**

- 지난해 약 3조원, 금년에는 약 2.4조원 성장지원펀드 조성을 통해 혁신기업 스케일업 지원여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.
- 바이오,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성·혁신성 위주의 차별화된 질적 상장기준 요건을 마련('19.6월)하고,
- 이익미실현 코넥스기업도 코스닥 이전상장을 허용하는 등 ('19.4월) 성장성있는 기업에 상장문호를 더 넓혔습니다.
- 아울러, 모험자본 공급 및 투자자금 회수 등 증권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도 인하('19.5월)한 바 있습니다.

**③ (정책금융) 정책금융을 통해서도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, 선제적 산업구조 재편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**

- 중견·중소기업 설비·기술 투자지원 등을 위한 '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(3년간 10조원)'은 올해 4조원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,
- 시스템반도체·바이오 등 新산업분야 자금공급(5조원) 및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지원 프로그램(2.5조원)도 하반기부터 새로이 도입·운영 중에 있습니다.

### 3. 금융감독 혁신 추진방향

- 혁신금융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령·제도정비 못지않게, 감독당국의 “일하는 방식”을 바꾸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.
  - ‘경기의 룰’이 바뀌더라도 ‘심판’인 감독당국이 종전의 엄격한 잣대와 관행을 계속 적용한다면, 금융권의 혁신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
- 이러한 인식하에,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금감원·시장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‘금융감독 혁신방안’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
  - 최근 혁신금융, 진입장벽 완화 등 정책여건을 반영하여, ‘진입-영업-검사·제재’ 등 쏘단계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,
  - 외부평가와 환류를 통해 감독혁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.
- ① **(진입단계)** 혁신적 사업자가 금융업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절차는 더 신속히, 진입요건은 보다 투명하게 운용하겠습니다.
  - 무엇보다, 금융위·금감원이 인·허가 서류접수를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권위적인 행태를 근절하고,
    -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, 금감원 컨설팅을 통해 인·허가 과정 전반을 적극적으로 안내·지원하고자 합니다.
  - 아울러, 외국계 금융회사의 조직변경 등 간소한 인가사항은 금융위원장 전결로 위임하여 처리기간을 대폭 줄이겠습니다.
  - 또한, 과도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인·허가 요건은 삭제·구체화하는 등 금융법규 정비를 지속 추진하되,
    - 불가피하게 재량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·허가 매뉴얼 등을 통해 판단기준·근거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.

② (영업단계) 수요자 입장에서 금융규제를 전수 조사·정비하고, 新산업 투·융자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신속히 해소하겠습니다.

○ 지난 5월 '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'에서 밝힌 바와 같이

- 규제입증책임 전환 원칙하에 총 1,100여건\*에 달하는 명시적·비명시적 금융규제를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.

\* 명시적 금융규제 789건, 행정지도 39건, 금융협회 자율규제 282건

○ 또한, 금융권이 보다 자유롭게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'익명신청제도'를 도입하겠습니다.

- 이에 더해, 특정분야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, 특정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법령해석, 비조치의견서를 공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.

③ (검사단계) 종합검사의 기준·절차 마련, 검사 처리기간 설정 등을 통해 검사의 투명성,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.

○ 검사 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 '표준처리기간'을 규정화하고,

※ [참고 현재 금감원 검사품질매뉴얼상 종합검사 180일 준법성검사 152일 등(유권해석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)으로 표준처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도과사례 많음

- 표준처리기간 초과건은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여, 최대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.

○ 아울러, 핵심부분 중점검사, 수검부담 완화방안 병행 등 지난 4월 발표한 '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'이 당초 취지에 맞게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.

4 (제재단계) 혁신금융 면책제도 활성화, 제재양정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제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.

- 현행 면책사유를 구체화하고,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권이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는 고의·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
-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양정기준 등 모호한 기준은 구체화하고,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,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제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제재심 안건 열람기간 확대, 심의결과 신속안내 등을 통해 제재 대상자의 권리보호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#### 4. 마무리 말씀

- “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”는 말처럼, 정부도 긴 호흡으로 금융권·유관기관과 함께 혁신금융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- 특히, 금융위·금감원 정례 협의체를 운용하여 금융감독 혁신방안 이행 등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,
- 감독서비스의 고객인 금융회사, 소비자의 외부평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감독혁신의 추동력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.
- 모쪼록, 오늘 참석해 주신 금발심 위원님들께서도 금융감독 혁신을 포함한 혁신금융이 시장에 안착하고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- 마지막으로, 금번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신 금융위·금감원 실무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, 향후 차질없는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